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돕는다... 전국 훈련센터 30곳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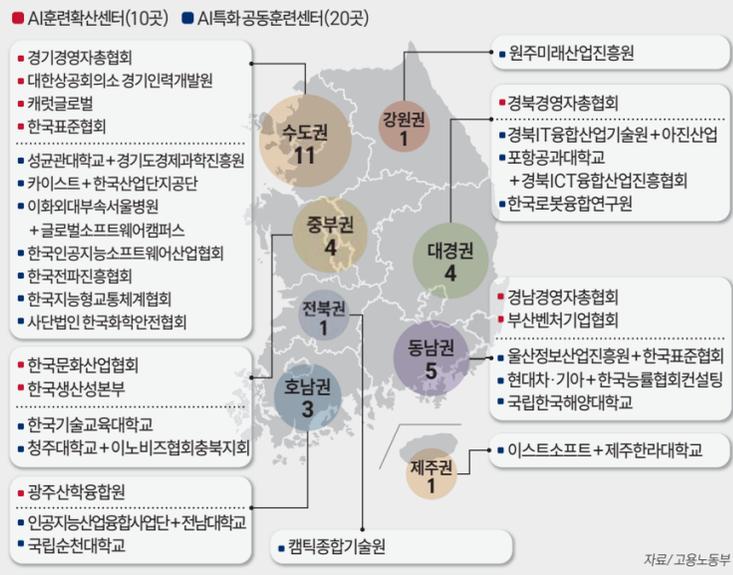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찾아가는 코치', 2.5만 곳 방문 대기업·대학 인프라 무상 개방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공지능(AI) 소외시대'에 놓였던 지역 중소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국에 30개의 AI 전문 훈련 거점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처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지역 중소기업에 AI 훈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AI훈련 확산센터' (이하 AI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 (이하 AI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AI확산센터는 민간 AI 훈련코치와 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약 500명의 전문 인력을 가동

전국 AI확산센터·AI공동훈련센터 현황



해 전국 2만 5000개 중소기업에 방문한다. 단순히 교육 과정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별 AX(인공지능 전환) 수

준을 진단하고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 맞춤형 훈련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처방전'을 제공한다. 민간 코치진

은 오는 4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개방된다. 선정된 20개 AI공동훈련센터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용 AI 비서 구축' 과정을, 동남권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제조 공정 불량예측 AI 모델 설계' 과정을 운영한다. 대전권의 포항공대는 철강 공정에 특화된 결함 판독 기술을 전수하며, 호남권은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분석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AI 솔루션 보급과 인력 훈련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현재 각 부처의 AX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7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AI 전환에 대한 지역·업종별 우수사례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기관 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AI와 인간이 협업할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AI 전환의 핵심"이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이 AI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훈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능력포털(www.hrd4u.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권역별로 마련된 공동훈련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손님 늘었는데 수익 ↓... 외식업, 속 빈 성장

농식품부, 2025년 외식업체경영 조사 영업이익률 12.1% → 8.7%로 줄어

국내 외식업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식재료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보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1.4% 증가한 수치다.

외식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식당 방문 고객 수는 53명으로 그보다 4년 전인 2021년(41.8명)보다 약 1.3배 증가했다. 객단가(1만4310원) 역시 물가 상승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면서 매출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는 더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업체(3억3000만 원)의 매출이 비 프랜차이즈(2억3000만 원)보다 1.5배 높았다.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뉴시스

이즈의 매출 격차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업종별 격차를 보였다. 출장·이동 음식점업은 5년간 매출이 10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김밥 등 간이 음식점도 70% 이상 성장했다. 반면 중식은 12.2% 증가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체 외식업계로 보면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2024년 기준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8.7%로, 2020

년(12.1%)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 증가율(46.7%)이 매출 증가율(41.4%)을 웃돌았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확대됐다. 운영 방식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 흐름으로 디지털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증가했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30%에 달했고, 바로 조리가 가능한 전처리 식재료의 비중도 29.3%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농협, 대응책 점검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농협중앙회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범농협 CFO(최고 재무책임자)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박서홍 부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사적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연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영향과 기업홍보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강연도 함께 진행해, 변화하는 제도와 여론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박서홍 부회장은 "중동 정세 불안 등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일수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내실경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모든 계열사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농업인 실익지원과 농촌 활력 증진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재무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금융지주·경제지주를 비롯한 범농협 주요 계열사 CFO와 농협중앙회 주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250m 연장' 착공

해수부, 안전한 선박 접안 도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 및 화물 선적, 하역을 돕게 된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접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는 작업이다. 부두 전면의 '정온도'(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파고 높이)의 확보를 추진한다. 공사에는 사업비 1012억 원이 투입된다. 2029년 3월 준공이 목표다.

공도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해, 새만금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탄소규제 대응 수출기업 밀착 지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현장방문·상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품목 6개를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규정 채택 후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체 1곳당 최대 제품 3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참여기업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지불 탄소 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